

공·사 영역의 변화와 ‘가족’을 넘어서는 가족 정책

이 재 경 *

초 록

가족정책의 전통적인 패러다임은 정상 가족(normal family)을 지지, 유지하는 동시에 공·사 영역(public and private spheres)의 분리를 전제로 구성되어 왔다. 즉 지금까지의 가족 정책은 정상 가족의 해체를 예방하거나, 문제 가족을 소극적으로 지원하고, 가족 문제를 ‘가족’ 내에서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21세기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진전되고 있는 일상생활과 노동시장의 변화는 ‘가족’ 개념과 가족 정책에 대한 새로운 사고와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1세기 가족 변화의 배경과 성격을 일과 가족의 근대적 조합에 대한 도전, 젠더구조의 불안정성, 핵가족의 불안정성으로 보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가족’에 대한 급진적 사고로의 전환과 이를 토대로 가족정책의 대안적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가족정책, 일/가족, 친밀성, 돌봄

I. 문제제기

가족정책의 전통적인 패러다임은 정상 가족(normal family)¹⁾을 지지,

*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1) 근대 산업사회에서 정상(또는 전형적) 가족은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고, 성별

유지하는 동시에 공·사 영역(public and private spheres)²⁾의 분리를 전제로 구성되어 왔다. 즉 지금까지의 가족 정책은 정상 가족의 해체를 예방하거나, 문제 가족을 소극적으로 지원하고, 가족 문제를 ‘가족’ 내에서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21세기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진전되고 있는 일상생활과 노동시장의 변화는 ‘가족’ 개념과 가족 정책에 대한 새로운 사고와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전 지구적 자본주의 경제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분화와 다양화는 산업 사회의 노동 중심적 가치와 남성노동자를 모델로 한 표준적 노동자상에 도전을 하고 있다. 가족임금을 기반으로 한 정규직 고용은 감소하고 24시간 노동 체제 속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 종사자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³⁾. 지속되는 고용의 불안정성은 노동자 계층 뿐 아니라 중간 계층의 경제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가족(가구)의 생계를 위한 여성의 소득 활동이 요구되면서 2인 생계부양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에서는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분업을 토대로 경제적 협동, 자녀 양육, 정서적 지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핵가족을 말한다.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핵가족’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기 보다 가부장적 가족을 유지하는 이데올로기임을 주장하고 있다(쏘온, 외 1991). 정상 가족(전형적 가족 또는 핵가족) 이데올로기는 가족을 자연스러운(natural) 사회제도이며 통시적이고 불변하는 것으로 보는데서 출발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가족의 역사성을 간과하고 산업 자본주의 사회이후에 등장한 서구 중산층의 특정한 가족 형태만을 정상적이라고 본다(이재경, 2003, pp.83-4).

- 2) 공·사 영역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공적(public)인 영역은 비인격적(impersonal)인 사회관계가 지배하는 시장, 국가, 시민사회 등을 포함하고, 사적(private)인 영역은 인격적(personal)인 사회관계에 의해 작동되는, 즉 가족을 말한다. 학자들은 산업혁명 이후 가족이나 친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던 생산과 재생산의 기능이 각종 사회제도로 분화되면서 공·사 구분이 강화되었다고 본다. 특히 근대 이후 공·사 구분은 성별화(gendered)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공적인 것은 남성의 영역, 사적인 것은 여성의 영역으로 분리하고 있다.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이러한 공사구분은 성별분업을 정당화 시키고 여성 억압 남성 지배를 지속시키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여 왔음을 비판하여 왔다(Eisenstein, 1981; Pateman, 1988; Rosaldo, 1974).
- 3) 2002년 여성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은 33.6%에 불과하고 66.4%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남성의 경우 정규직 58.8%, 비정규직 41.2%로 분포되어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비정규 노동의 여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여성개발원, 2003).

국가와 기업의 시각은 여전히 노동시장과 가족을 분리된 영역으로 간주하며, 가족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변화 추세는 성별 분업을 기초로 한 **일과 가족의 근대적 조합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몇 십년간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고,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근대적 가정 중심성(domesticity)은 가족 안에서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여성에게 부과하고 있다. 부부간 가사 분담의 요구가 여성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주장되고 있지만, 돌봄 노동을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근대의 젠더 구조와 이를 토대로 한 가족 내 성별분업의 변화속도는 더딘 실정이다. 여성의 사회 활동이 활발해짐과 동시에 여성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기대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여전히 가부장적 질서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족 내에서의 남녀갈등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 된다⁴⁾. 또한 평등, 취업에 대한 욕구 증가와 호주제를 둘러싼 젠더 갈등으로 나타난 여성의 변화⁵⁾ 등은 **젠더구조의 불안정성**을 보여 준다.

한편 시·공간을 초월하는 글로벌 경제체제는 가족과 일상생활에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 고용불안에 의한 가계 경제의 위축,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치루는 시간적, 심리적 압력 등은 일상적인 가족생활에 위협이 되고 있다. 핵가족을 구성하는 성별분업 체계는 2인 생계 부양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정서적 지원과 양육, 부양 등 돌봄 노동의 공백이 생기고 있다. 또한 불안정한 고용으로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지연시키며

4) '빠르게 변화하는 여성'과 '느리게 변화하는 남성'간의 긴장은 이제 취업여성의 이중 부담으로 인한 역할 갈등을 넘어서 부부갈등의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성평등의 가치를 수용한 여성들은 임금노동과 가사 및 양육 노동의 이중 부담을 감내하기 보다는 남편과의 공평한 분담을 요구하고,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남편들과 갈등을 표출하기도 한다(마경희, 2004, p122).

5) 여성들의 변화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정체성의 변화이다.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직장 내에서의 경력추구와 직업적인 성공에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들의 다중적인 정체성 중에서 주부와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뿐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에 보다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젠더구조가 불안정해 짐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Hochschild, 2003; 이재경·장미혜, 2004).

가족을 이루기를 주저한다. 최근 우리사회에서도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구, 재혼 가구, 2인 생계부양(맞벌이) 가구, 자녀를 두지 않는 부부 가족, ‘기러기 아빠’로 칭하는 별거 가구, 동거 가구, 가족 형성의 토대를 이성애적 결합에 두는 결혼규범에 저항하는 동성애 가구, 독신 가구 등 가족 구성과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 **핵가족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가나 사회가 가족의 현실적 다양성을 수용해야하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즉 가족의 범위나 경계,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는 하나의 정상 가족 개념은 존재하기 어렵다. 최근 ‘저 출산 쇼크’로 인해 무성해진 가족 담론에서는 가족의 위기를 해결하거나, 또는 후기 근대적 가족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수정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⁶⁾.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에서는 21세기 일과 가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족’에 대한 급진적 사고로의 전환과 이를 토대로 가족정책의 대안적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통계로 본 한국 가족의 현황

1. 가족(가구)구성의 변화

지난 30여 년간 우리사회에서는 가구 구성 또는 가족 형태가 변화하여

6) 2004년 12월 현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법 제779조 개정안은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가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서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을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 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가구형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법안은 가족에 대한 전통적 가치와 개념을 고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재경, 2004a; 2004b).

왔는데, 이는 3세대 이상 가구의 감소와 1세대와 단독 가구의 증가 추세로 나타난다. 3세대 이상 가구의 경우 1975년 20.1%에서 2000년 13.8%로 감소한 반면, 1세대 가구는 6.7%에서 10.0%로 증가하였고, 1인 가구는 4.2%에서 5.0%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2세대 가구의 경우에는 1975년 68.9%에서 2000년 70.0%로 약간 증가하였다(한국여성개발원, 2001). 1인 가구 및 1세대가구가 증가하는 것과 3세대 이상 가구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현상은 가족형태 변화에 대한 주목할 만 시사점을 던져 준다. 즉 3세대 이상 대가족이 감소하는 만큼의 비율이 1세대와 단독가구의 증가 비율로 이전되는 것이다. 즉 대가족의 감소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러한 통계자료는 가족(가구)의 형태가 점차 다양화해 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⁷⁾. 한편 2003년 전국 3,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가족조사 □□에서 나타난 가구형태를 가족원 구성에 따라 세분화시켰을 때 다양화의 현실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표 1> 참조). 즉 세대별 가구 형태나 핵가족/확대가족의 범주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가구)구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표 1>에서는 각각의 가구 형태 내에서 가족원 구성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7) 가족의 다양성이란 가족(가구)형태의 다양함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가족을 구성하는 방식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형태가 지배적인 비율로 나타나는데, 이는 이러한 형태가 편리한 삶의 방식이라는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2세대 가구(또는 핵가족)가 다수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해서 이러한 형태의 가족이 정상이라거나 개인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의 차이나 다양성을 부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우리가 가족의 다양성을 말하는 것은 모든 형태의 가족이 동일한 비율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형태의 가족을 특권화하고 여타 다른 가족의 형태를 위계화 시키는 것에 대한 비판이 핵심적인 것이다. 개인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생애주기의 변화,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배우자와의 별거 또는 이혼, 결혼 전 독신생활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가구) 구성을 경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부부와 자녀가 동거하는 하나의 특정한 가족형태만을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1> 가족원 구성에 따른 가구형태

구 분	가족원 구성	빈도	백분율
전형적 가 족	부부가구	535	15.3
	부부/미혼자녀	1,827	52.3
	친정부모/기혼자녀부부	7	.2
	시부모/기혼자녀부부	63	1.8
	친정부모/부부/미혼자녀	27	.8
	시부모/부부/미혼자녀	207	5.9
	시부모/부부/기혼자녀부부	1	.0
	4세대 가구	3	.1
	소 계	2,670	76.4
전형적 가족 +기타구성원	부부+형제자매	4	.1
	부부+기타친척	2	.1
	시부모+부부+미혼형제자매	1	.0
	부부+자녀+배우자/형제자매+기타	1	.0
	부부+자녀+배우자/형제자매	6	.2
	부부+자녀+기타 친척	4	.1
	소 계	18	0.5
1세대	형 제 자 매	8	0.2
부모+이혼자녀 (+손자녀)	부모/딸/미혼자녀	13	.4
	기혼아들+부모	1	.0
	부모/기혼아들/미혼자녀	5	.1
	기혼딸/기혼아들/부모	1	.0
	부모/기혼딸/기혼아들/손자녀	2	.1
	부모/기혼딸/미혼자녀/손자녀	2	.1
	소 계	24	0.7
단 독	노인단독(여성 87.6%)	194	5.5
	기혼단독(여성 67.8%)	118	3.4
	미혼단독(여성 55.6%)	232	6.6
	소 계	544	15.6
한부모	아버지/미혼자녀	12	.3

구 분	가족원 구성	빈도	백분율
	어머니/미혼자녀	174	5.0
	소 계	186	5.3
조부모+손자	할머니/손자	15	.4
	조부모부부/손자	17	.5
	조부모부부/미혼자녀/손자	2	.1
	할머니/미혼자녀/손자	4	.1
	조부모/손자부부	3	.1
	소 계	41	1.2
기 타	소 계	5	0.1
계		3,496	100.0

2003년 □□전국가족조사□□에 의하면 부부 혹은 부부와 미혼 자녀를 핵으로 하는 전형적 핵가족은 67.6%이고, 부부와 기혼 자녀 및 손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포함하여 정상가족의 범주에 속하는 가족은 76.4%이다(<표1 참조>). 경제적 공동체로서, 돌봄 공동체로서 기능을 자족적으로 수행할 수 있거나 국가 등 가족 외부의 잔여적 복지지원에 상대적으로 적게 필요로 한다고 가정되는 가구('전형적 가족+기타구성원' 0.5%, 형제자매 0.2%, 미혼단독 6.6%)를 포함하면 83.7%이다. 그러나 노인단독가구 5.5%, 한부모 가족 5.3%,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1.2%로 나타나고 있어 동거하지 않는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이 없다면 복지수요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구는 12.0%에 달한다(여성부, 2004, p310).

2. 혼인의 감소와 이혼의 증가

최근 우리사회에서 나타난 가족의 변화 중 주목할 만한 현상은 혼인의 감소와 이혼의 증가이다. 이혼의 증가를 가부장적 결혼에 저항하는 여성의 선택이라고 보기도 하고, 어려운 가족생활을 인내하지 못하고 가족을 해체하는 이기적 여성의 행위로 비판 받기도 한다. 그러나 다양한 해석과 처방과는 무관하게 이혼은 증가하고, 독신은 늘어가고, 결혼연령이 높아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구동태 통계(<표 2 참조>에 의하면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이혼 건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혼인 건수는 304,932건으로 1990년과 비교하여 94,380건 적게 혼인함으로써 조 혼인율이 9.3에서 6.3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혼의 경우 1990년의 45,694건에서 1995년 68,279건 그리고 2003년 167,096 건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 혼인율은 1990년 1.1에서 1995년 1.5로 증가하고 2003년은 1990년과 비교하여 인구 1,000명당 이혼하는 건수가 5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흔히 이혼율의 증가는 여성취업 증가와 정적인 관계가 있고, 여성 지위의 향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지위향상의 측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이혼 후 여성들의 곤궁한 삶은 여성의 빈곤화라는 지위 하락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⁸⁾.

<표 2> 혼인수 및 이혼수

(단위 : 건수, %)

년 도	혼인수	조혼인율 ¹⁾	이혼수	조이혼율 ²⁾	결혼에 대한 이혼율비 ³⁾
1980	403,031	10.6	23,662	0.6	5.9
1985	376,847	9.2	38,838	1.0	10.3
1990	399,312	9.3	45,694	1.1	11.4
1995	398,484	8.7	68,279	1.5	17.1
2000	334,030	7.0	119,982	2.5	35.9
2002	306,573	6.4	145,324	3.0	47.4
2003	304,932	6.3	167,096	3.5	54.8

주: 1) 혼인수/해당년도인구×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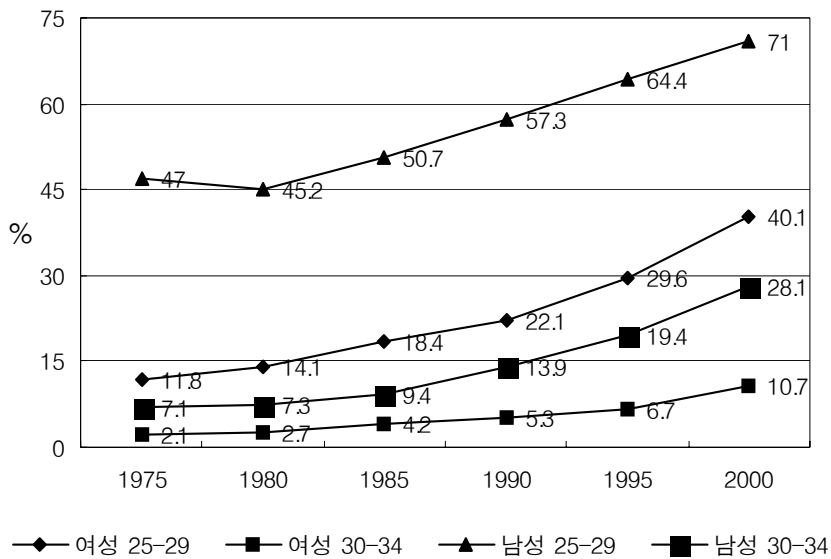
2) 이혼수/해당년도인구×1,000

3) 이혼수/혼인수×100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 □□2004 여성통계연보□□, 2004

8) 우리 사회에서 무배우(이혼, 사별, 미혼)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화 위험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과 2000년의 빈곤 여성가구주의 결혼상태별 현황을 보면, 무배우의 경우 유배우의 경우보다 빈곤율의 증가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의 경우 빈곤율이 100% 증가한 반면, 무배우의 경우 136% 증가하였으며, 단순 변화 폭에서도 유배우의 경우 5.6% 증가하였으나, 무배우의 경우는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영란 외, 2003; 166-168).

한편 혼인의 감소는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혼인 지연 현상과 독신인구 증가와 관련이 있는데, <그림 1>을 보면 지난 30 여 년간 2, 30대 남녀 인구 중 혼인하지 않는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만혼은 결혼 및 가족 의식의 변화, 경제적인 동기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⁹⁾, 출산율 하락을 촉진시키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림 1] 성별 연령별 비혼 인구 비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1977, 1982, 1987, 1992, 1997,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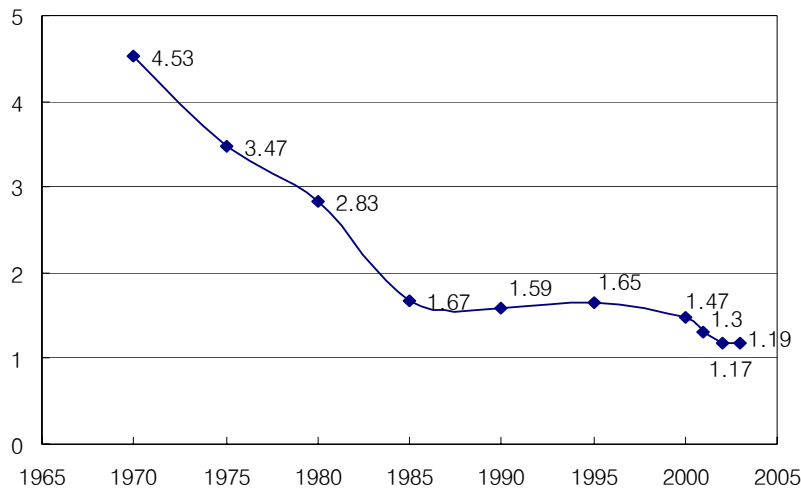
9) 2004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미혼남녀 75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결혼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기반구축과 자신의 일에 몰입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미혼 여성(389명)의 경우 결혼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24.4%), 경제적 기반 부족(20.1%), 상대방에게 구속되기 싫어서(9.8%), 결혼으로 인한 책임 부담(9.3%), 결혼은 여성에게 불리(4.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남성(384명)의 경우 나의 일에 더 열중하기 위하여(21.4%),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14.8%), 결혼으로 인한 책임 부담(8.6%), 상대방에게 구속되기 싫어서(6.5%)의 순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12월 28일).

3. 출산율의 하락

2002년 가임기간 동안 여성 1명이 낳은 있는 자녀수는 1.17명이다. 독신여성의 증가와 만혼 등으로 인해 합계출산율¹⁰⁾은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2> 참조). 2002년 여성은 가임기간 동안 1980년 가임기 여성과 비교하여 1.6명의 자녀를 적게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것은 여성의 지위가 낮은 것으로 말해지는데, 즉 다산으로 인한 여성건강의 문제, 출산조절이 불가능함으로써 제기되는 여성의 재생산 권리(reproductive right)의 문제, 장기간의 자녀출산과 양육의 부담은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의 어려움 등이 낮은 여성의 지위와 연결된다. 우리 사회도 최근 저 출산이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취업과 양육의 갈등적 조건,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 양육, 교육비의 상승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성취업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 성별분업이 완화되거나 여성들의 이중노동을 지원하는 제도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학자들은 저 출산의 현상을 ‘출산파업’으로 보고 있다. 앞서 언급한 이혼의 증가는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결혼관계에 대한 여성들의 저항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출산율의 감소는 결혼 제도내의 섹슈얼리티가 재생산을 위한 것으로만 국한되는 방식에 대한 도전임과 동시에 가족 내의 자녀에 대한 의미가 변하고 있음을 시사 한다¹¹⁾.

10) 합계출산율이란 여자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갖게 될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11) 결혼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미혼 남녀의 의식도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03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결혼 후 자녀가 없어도 된다는 이유로 남녀 모두 경제적 부담과 부부의 애정만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과거에는 자녀출산이 결혼의 안정을 보장하고 가족의 대를 있는데 필수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져 왔지만 이러한 의식은 점차로 약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조선일보, 2004년 12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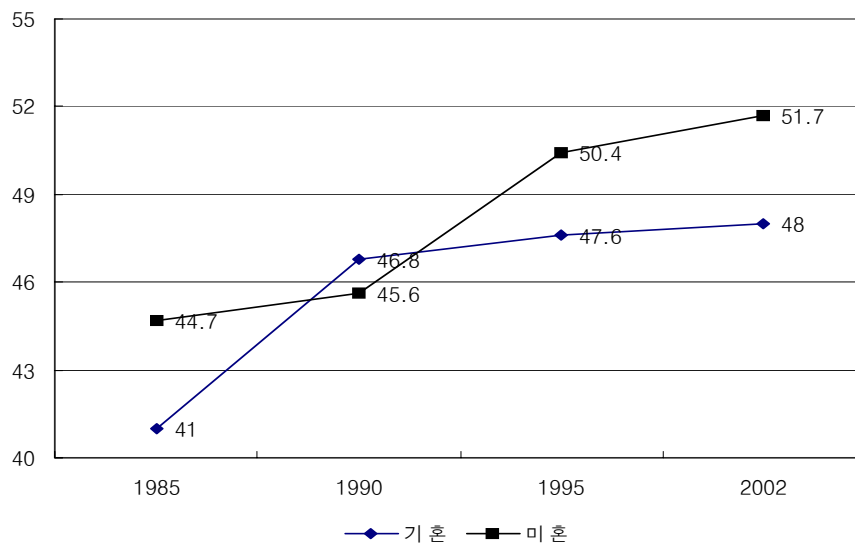


[그림 2]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년도.

4. 기혼여성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960년 26.8%에서 2003년 48.9%(기혼 48.0%, 미혼 51.7%)로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그림 3> 참조). 미혼·저 연령 여성으로 대표되었던 6,70년대 여성노동력의 구성은 1980년 대 이후 기혼·고 연령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혼인 상태별 구성을 보면 2002년 현재 미혼 여성의 50.6%, 유배우 여성의 52.0%, 사별·이혼한 여성의 38.7%가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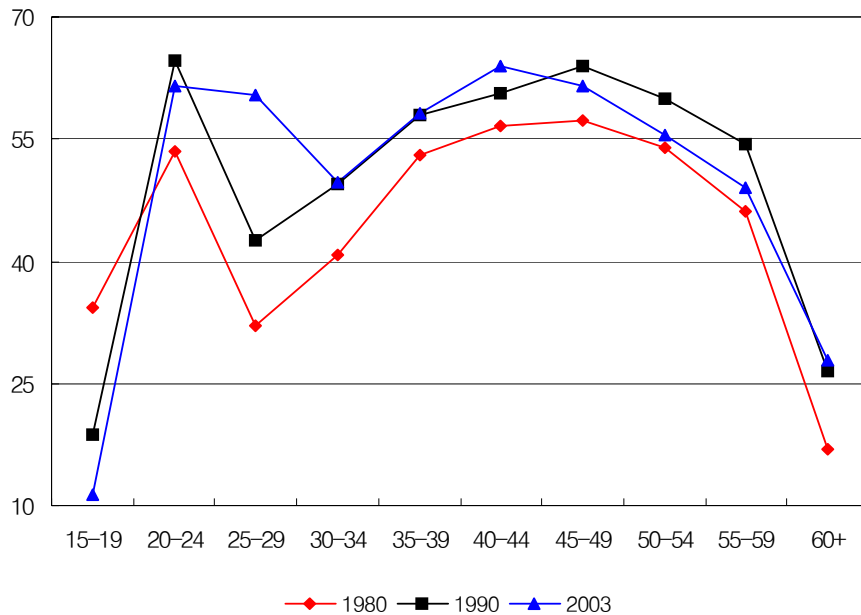


[그림 3] 혼인상태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 통계청, □□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변화□□, 199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6, 2003.

한편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아직도 M자형 취업유형의 특성을 보이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그 정도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4> 참조). 미혼의 연령대로 추측되는 20대 전반과 자녀 양육기를 보낸 40대 이후의 취업률이 가장 높으며, 결혼·임신·출산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25-34세의 취업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여성의 취업이 생애주기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과 개인 여성들에게 양육과 관련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사회적 지원체계의 부재를 반영하는 것이다. 여성들이 결혼이나 임신·출산·초기 양육 시기를 지나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경우 여성들은 이전의 임금이나 지위에 준하는 자리에 취업하기보다 하향 이동하여 진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노동시장 참여의 불연속성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들의 낮은 지위를 지속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림 4]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 통계청, □□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변화□□, 199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6, 2003.

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증가하고, 결혼·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해 노동시장을 떠나는(또는 퇴출되는) 여성들의 비율도 감소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지속되는 노동시장의 성차별에도 불구하고 전 연령층에서 여성들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혼여성의 취업은 2인 생계부양가구의 증가로 나타나는데, 2003년 □□전국가족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3,500여 가구 중 맞벌이 가구가 35.8%를 차지하고 있다.

Ⅲ. 일과 가족의 경계 구성과 ‘가족’ 정책의 쟁점

1. 일과 가족의 분리: 근대 핵가족과 성별 분업

근대 산업사회의 출현은 일과 가족의 영역에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전 산업사회에서는 개별 가구 내에서 이루어지던 생산과 재생산 활동이 각각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분리되어 배치되었다. 생산 노동의 시장화는 남성을 임금 벌이자/생계 부양자로 규정하고, 여성을 노동력 재생산을 담당하는 무급 돌봄 노동자로 위치시켜 왔다. 산업기술의 발달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진전은 다양한 직업을 창출하고 사회이동을 촉진시켰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가족, 즉 핵가족이 출현하게 되었다. 기능주의 사회학자들은 산업사회와 핵가족의 정합성(fit)을 강조하면서 공사 이분법과 안식처로서의 사적 가족의 가치를 정당화 하여 왔다. 핵가족 모델에서는 남녀를 일과 가족의 영역에 각각 배치시키는 성별분업을 효율적·기능적인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일과 가족의 분리와 핵가족의 보편성은 가족제도 뿐 아니라 경제, 법, 문화 등 타 사회제도에 체계화되어 왔다.

근대의 핵가족은 위계적 공사 이분법 속에서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되는 여성의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에 의존해 있었다. 가족 안에서 여성은 어머니로서의 중요성을 평가받았지만, 고립된 양육자였고, 여성의 이러한 돌봄 노동은 남성의 생계벌이 노동과는 대조적으로 생산적이지 않으며, 일이 아닌 것으로 여겨져 왔다. 여성의 경험 세계에 대한 이러한 가치절하는 여성을 열등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평가와 연관되어 있다. 핵가족은 여성의 돌봄 노동에 의존하여 그 가장 큰 특성인 정서적 기능을 강조해 왔으면서도, 역설적이게도 여성의 돌봄 노동을 저평가함으로써 근대 가족 안에서 새로운 남성 중심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우리사회 가족(관련)정책은 정상가족의 규범과 성별분업을 지지하는 범위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가족 내 여성의 역할에 의존하여 ‘선 가정, 후 국가 개입’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취약 가족에 대한 사후대책에 치중하여 왔다. 즉 요 보호 아동, 노인, 부녀에 대한 소극적 지원을 통

해 가족의 기능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를 엄밀한 의미에서 가족 정책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요 보호 대상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도 단편적 이어서 가족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산재해 있는 가족 관련 정책이나 서비스를 포괄적인 가족정책의 틀에서 새로이 접근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문제 가족 중심에서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변화순, 2004; 장혜경, 2003).

최근 우리사회가 당면한 출산율의 하락, 이혼 증가 등의 '가족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003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법에서 양성평등과 가족의 다양성을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가정과 건강하지 않는 가정의 이분법을 통해 정상(핵)가족 이데올로기를 지속시킨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윤홍식, 2004; 이재경, 2004a). 즉 가족변화 또는 가족문제를 초래하는 요인을 또 다시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의제 구성의 모순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건강가정 기본법을 포함하여 가족의 위기를 강조하는 정책담론들은 급변하는 가족 외부의 요인을 간과한 채 가족 안에서만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있다.

2. 일과 가족의 갈등 I: 모성권과 노동권의 경합

지난 몇 십 년간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고,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근대적 가정중심성(domesticity)은 가족 안에서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여성에게 부과하고 있다. 부부간 가사 및 양육 분담의 요구가 여성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주장되고 있지만, 돌봄을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근대의 젠더 구조와 그에 기반을 둔 가족 내에서의 성별 분업의 변화속도는 더딘 실정이다. 여성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짐과 동시에 여성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기대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부장적인 질서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가족 현실에서 취업한 기혼 여성들은 직업과 가사/양육 노동의 이중 부

담을 지고 있다. 또한 양육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취약한 상황에서 여성들의 노동권과 모성권은 경합하게 된다. 근대 사회 노동과 가족의 분리는 일차적으로 여성을 양육자로 규정하는데, 이는 얼핏 여성의 모성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실은 보다 복잡하다. 공·사 분리의 신화(myth)는 여성에게 모성권의 침해나 노동권의 박탈을 은폐한다. 즉 여성의 영역은 가족이라는 통념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접근하는데 장애가 되며, 가정에는 양육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가정은 일하는 어머니의 모성권을 보장하지 못한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재하고 남성 중심의 노동규범이 지속되는 한 일하는 어머니는 자녀를 보살피고 정서적 유대를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여성의 일차적 정체성은 어머니/아내라고 인식되고 있지만 최근의 연구(이재경·장미혜, 2004)에서 취업하고 있는 기혼여성들은 직업 정체성을 강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취업하고 있는 기혼 남녀 60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 결과 직업 성취지향성과 가족지향성에서 성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사 및 양육 담당자'라는 근대적 성별분업에 대한 가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여성은 가족에서 일로, 남성은 일에서 가족으로'라는 삶의 가치지향성의 변화가 곧 성별분업 해체와 성 평등을 가지고 온다고 말할 수 없다. 새롭게 재구성되는 공사 영역의 변화와 일과 가족의 경계 약화는 여성의 이중부담과 갈등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 노동시장의 변화는 가족의 현실을 변화시켰으며, 성별분업의 규범은 도전받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전략은 출산 지연 또는 소자녀 출산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노동권과 모성권의 경합은 계층 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고학력 전문직 취업여성의 경우는 대가족 네트워크 내에서 또는 시장을 통해 양육의 부담을 해결하면서 노동권과 모성권을 동시에 지키려고 시도한다. 한편 이혼 또는 사별로 인한 가난한 여성 가구주들은 생계 별이를 위해 노동시장에 편입하지만, 이는 자녀들을 위한 생계 별이라는 점에서 모성권을 우선시하기도 한다(조혜련, 2003).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이들 여성들의 노동권과 모성권은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는다.

“부모와 사회가 함께하는 보육공동체”라는 구호 아래 보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보육정책은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을 지원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하지만, 여성의 이해와 아동의 이해를 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바키(Bacchi, 1999)는 보육정책에 관한 문제 재현(problem representation)이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논의하고 있다. 여성의 노동권을 지원하는 여성취업의 필요조건으로서의 보육, 빈곤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을 지원하는 빈곤층에 대한 복지로서의 보육, 그리고 빈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초기 아동 교육으로서 보육이다. 어떤 경우에도 여성과 아동의 이해를 조정해 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현재 여성부에서는 집행하고 있는 보육정책과 2005년부터 시행될 가족정책¹²⁾이 어떤 유기적 관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일과 가족의 갈등 II : 친밀성의 변동과 돌봄의 공백

전 지구적 자본주의 경제의 진전에 따른 노동시장의 재 조직화는 고용 불안정, 중간 계층과 노동자 계층의 경제적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고용불안에 의한 노동시간의 감소는 가구경제의 위협이 되는 한편, 심화된 경쟁으로 인한 노동시간의 증가는 개인의 사적 생활에 대한 제약으로 나타난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같은 사회변화가 가족 이데올로기와 가족임금의 해체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한편 많은 가족문제와 ‘빈곤의 여성화’와 같은 사회 문제를 초래한다(이미경, 1999). 한편 24시간 노동체제에서 고용이 불안한 남녀 노동자들은 2가지 직업을 병행하기도 한다¹³⁾. 이

12) 2004년 12월 청와대 정부혁신위원회는 2005년부터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재편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어 여성부에서는 향후 가족정책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1)가족의 안정성 강화, 2)출산과 양육에 대한 보호와 지원, 3)남성의 부모역할 강화, 4)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5)‘가족-학교-지역사회’의 소통과 연대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13) 고용불안을 느끼는 남녀 노동자들은 직종 변경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자격증을 따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며,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

러한 상황에서 성인들은 시간 부족을 경험하고, 강화된 노동시장의 압력과 동시에 가구 유지(또는 소비)에 대한 높은 사회적 기준은 가족관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 부부와 부모·자녀 간의 감정적, 정서적 자원을 나눌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은 감소하고 친밀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의 능력은 저하되고 있다¹⁴⁾.

이처럼 노동시장의 변화와 노동시간의 유연화는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가족 내 친밀성도 변화시키고 있다. 여성들이 경험하는 일과 가족의 경계 변화와 가족 내 친밀성의 변화는 여성들에게 다른 정체성과 친밀성을 추구하도록 하는데, 기혼직장 여성들은 작업장에서 동료들과 새로운 친밀성을 나누고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해나가고 있다(Hochschild, 1996)¹⁵⁾. 여기에서 우리는 가족 내에서 배타적으로 충족되어온 친밀성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친밀성(intimacy)¹⁶⁾은 인간의 본성인가? 아니면 근대에 나타난 문화적 현상인

트를 하기도 한다. 한편 가족의 생계나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위해 유통업체에서 저임금의 판매원으로 일하거나 밤에 대리운전을 하는 여성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낮에는 가사/양육 노동, 밤에는 소득활동을 하는 것으로 2 가지 직업을 가지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 14) 최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증가하고,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가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녀 양육은 가족의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서구의 연구에서는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는 육아를 위해 시간 교대 근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 부부간의 의사소통 문제와 가족의 친밀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Williams, 2000; Rubin, 1997).
- 15)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일과 가족관계의 재편성이 일어나는 징후들이 발견되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기에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면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희생한 채 오직 직장에서의 성공적인 경력만을 추구하던 남성들 사이에서도 서서히 가족 내에서의 사적생활이 자신의 삶에서도 중요하다고 보는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고 가족의 요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역할갈등과 위기를 경험하기도 한다. 취업 남성과 여성 모두 직장가 가정 사이에 생기는 갈등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기혼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일과 가족생활 사이의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수준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일수록 일을 통한 자아성취감이나 가족생활의 활력 요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소득이 높은 남성의 가족지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점차 일과 가족의 성별에 따른 영역의 경계가 해체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이재경·장미혜, 2004).
- 16) 친밀성은 개인적 삶의 핵심개념이며, 타인을 알고, 사랑하고 가까워지는 구체적 행위를 포함한다. 타인과 이야기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자

가? 친밀성의 욕구는 가족 내에서만 충족할 수 있는가? 노동시장의 변화와 친밀성의 변동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비혼·만혼·이혼의 증가와 이성애적 혼인 규범의 약화는 근대적 친밀성의 개념에 도전이 되고 있는가? 출산율의 하락은 젠더 갈등 또는 경제적인 요인에서 비롯되는가? 아니면 친밀성과 관계에 대한 문화적 이상(ideal)의 변화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족의 변화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친밀한 관계 또는 친밀성의 공유는 개인들 간의 다양한 관계에서 존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회에서 친밀성은 결혼과 가족의 테두리에서 제도화되어 왔다. 그러나 후기 근대적 상황에서는 친밀성의 욕구 충족은 결혼과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기도 한다. 시장경제의 확대는 친밀성의 상품화(Hochschild, 2003)를 진전시키기도 하고, 공간적 제약과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는 별거 가족, 예컨대 기러기 가족이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 외국에 이주해 온 여성노동자 가족은, 가족 내에서 충족되어온 친밀성의 유지에 위협을 받기도 한다.

한편 일과 가족영역의 변화에 대한 제도적 지체는 가족 내 돌봄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증가하는 2인 생계 부양가구에서 돌봄 노동에 대한 요구는 남녀 누구도 노동시장의 조건과 양립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과 가족의 이중 역할을 수행해 왔던 여성들은 더 이상 양육과 노인 부양의 책임을 혼자 감당하고자 하지 않는다. 돌봄 노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점차로 유연화 되는 글로벌 시장경제와 가족의 요구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는 성별 분업을 완화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즉 돌봄 노동의 사회화와 전통적인 성역할을 재정의 함으로써 가족 내 역할의 남성 참여를 유도하고 돌봄의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의 대체법안으로 2004년 12월 현재 의원발의를 준비 중인 □□가족지원기본법□□(안)에서는 부모의 양육권에 대한 지원¹⁷⁾과 가족구

신의 감정을 보이는 '친밀성 보이기'에서 핵심은 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들 간에 끊임없이 속내와 감정을 표출하는 상호 드러내기이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인 접촉이라기보다는 자아 존재의 친밀성을 의미한다(Jamieson, 1998).

- 17) 제13조(모성권리의 보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여성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태아검진 및 산전·산후 건강관리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성원의 부양에 대한 지원¹⁸⁾을 명시하고 있다.

<표 3> 일과 가족의 변화와 ‘가족’ 정책의 쟁점

일/가족배치	가족 구성	성별관계	문제재현	주요쟁점	정책방향
일/가족 분리	1인 생계부양가구 /혈연중심	경직된 성별분업	개별 가족의 문제	문제가족	잔여적 복지 소극적 지원 (요보호아동, 노인, 부녀등 대상)
일/가족 갈등 I	2인 생계부양가구 /혈연중심	성별분업에 대한 도전 시작	여성문제	평등, 모성권, 노동권	보육서비스 출산/육아지원
일/가족 갈등 II	2인 생계부양가구/ 다양한 가족(가구) 구성	성별분업 약화	양성모두의 시민적 권리 가족(가구) 의 보편적 권리	평등, 부모권, 노동권, 아동의 행복추구권	돌봄노동의 사회화 모성/부성권의 보장
일/가족/ 지역사회 통합	다양한 가족(가구)구성	성별분업 해체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	돌봄의 가치 확대	돌봄의 가치로 사회를 재조직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아검진 휴가, 유·사산 휴가 및 산·전후 휴가 등 일하는 여성의 임신·출산과 관련한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부성권리의 보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한 제도 및 법률에 있어 부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육·부양·보살핌 등에 있어 남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가족형태를 고려한 자녀양육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자녀양육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8) 제17조(가족구성원에 대한 부양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족에 대하여 부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족이 필요에 따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19조(가족간호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병이나 사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 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표 3>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해 온 일과 가족경계 구성에 따른 가족과 성별관계의 변화, 변화를 인식하는 문제 재현(problem representation),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가족정책의 쟁점과 방향을 정리하고 있다. 이 표는 일과 가족의 변화를 사고하는 시론적 분석틀로 제안한 것일 뿐 보편적 이론을 구상하고자 한 것은 아님을 밝힌다. 마지막 칸에 제시되고 있는 일·가족·지역사회가 통합되는 미래의 모습은 다음 절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IV. 결론: ‘가족’을 넘어서는 정책의 대안적 사고

1. 일·가족·지역사회 공동체의 재통합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과 가족의 분리와 성별 위계는 산업 사회의 산물이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일과 가족의 공간 분리를 완화시키고, 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확산되고 있으며, 경제의 재조직화로 여성고용에 대한 가족 그리고 사회적 요구는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동 추세에서 우리는 일(노동)과 개인적 삶, 그리고 가족생활이 통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를 재조직화 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단지 미래 사회 인간의 삶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일·가족·지역사회가 다시 통합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산업사회에서 일과 가족의 분리는 도심과 교외라는 공간적 분리를 동반하였다. 공간의 분리는 때로 매력적으로 여겨지지만 성별화된 공간 배치, 성별화된 여가 문화, 교통체증의 시간 압력 등으로 인해 가족들이 함께 하는 시간이 감소되었다. 일터와 집이 가까이 있고, 남성 중심적 노동규범에 의한 장시간 노동이 변화하고, 소외된 핵가족의 경계가 해체될 때, 양육을 포함한 돌봄의 책임은 개인 남녀, 가족, 지역사회 공동체, 국가가 공유할 수 있다¹⁹⁾. 일과

19)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의 업무개편에 앞서 발표한 가족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한 ‘가족-학교-지역사회의 소통과 연대강화’가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데 일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통합²⁰⁾되기 위해서는 사회 변동의 수사를 넘어 기존의 시스템이나 제도들이 재조직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사고가 필요하다. 즉 돌봄의 사회화는 단지 국가나 기업의 지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제도가 돌봄의 가치를 토대로 재조직화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2. 가족(가구) 개념의 확장

가족의 다양성²¹⁾이라는 수사는 특정한 범주의 개인과 가족(가구)를 차별하지 않는 제도적 변화를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혈연, 이성애, 혼인 중심의 사고에 대한 해체가 필요하다. 가족의 정의나 범위 규정에 관한 논란은 ‘가족정책’에서 정책의 대상을 누구로 또는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민법 개정안이나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의 정의는 특정한 형태의 가족을 옹호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가족지원기본법□□(안)에서도 이러한 고민을 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즉 법이라는 관료제 담론에서는 ‘하나’의 개념만이 인정된다. 그 외에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법이 인지하는 경우 포함될 수 있다²²⁾. 정책의 대상은 말해지고 재현되는 방식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쟁점과 문제에 대한 모든 서술은 그 자체가 해석이고,

20) 예컨대 공동육아나 대안 학교 등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특히 서울 마포의 성미산을 지키는 주민들의 연대는 공동육아, 생협, 대안학교 등의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성공적인 사례로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일·가족·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통합되는 활동들은 계층적인 경계를 넘어서고 있지 못하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계층간의 차이를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이 시점에서는 돌봄의 연대가 계층의 경계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1) 가족 개념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이재경(2004b)를 볼 것.

22) 제3조(정의) 이 법에서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등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가족으로 본다.

1.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2.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고 있는 공동체
3. 민법상 후견인이 있는 공동체
4. 미혼부모와 아동으로 구성된 공동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체

해석은 판단 그리고 선택들과 연관되며, 해석은 이미 개입이다(Bacchi, 1999).

가족의 다양성은 핵가족의 불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이박혜경, 2004)이며, 이는 가구형태의 다양성만이 아닌 가족을 규정하는 원칙들, 예컨대 혈연, 이성애, 혼인을 핵심으로 한 범위나 경계 설정, 기능들에 대한 숙고를 요구한다. 다양성은 '중심'이나 '정상'의 사고를 벗어날 때 가능하다. 예컨대 미래에도 핵가족의 형태는 다수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핵가족의 보편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핵가족의 형태가 편리한 삶의 형태일 수 있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유럽의 동거비율이나 혼인 외출산비율(50% 이상), 우리사회 국제결혼의 증가는 삶의 형태가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외국에서 신부를 데려 오고, 혼혈 자녀 출산을 기피하기도 하고, 외국에서 사업하기 위해서 국제결혼을 하는 남성들은 더 이상 기존의 혼인과 가족에 대한 사고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3.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 돌봄의 연대

근대 산업사회를 지배해 온 경제, 경쟁, 발전의 논리는 인종, 계급, 젠더, 국가 간의 위계적 질서를 심화시켜왔으며, 더 이상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되고 있다. 우리는 안정된 가족생활을 꿈꾸지만 경쟁과 발전의 사고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항상 불안정함을 경험한다. 개인의 성공이나 가족의 번영에 대한 욕구는 가족간의 갈등을 만들기도 하고, 가족 이기주의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기도 한다. 공적 영역에서의 경쟁은 사적 영역의 희생을 전제로 가능하다. 즉 사회적 보상이 따르지 않는 여성의 돌봄 노동이 경쟁에서의 성공을 가능하게 해 왔다. 그러나 후기 근대 일과 가족의 경계가 재구성되면서 돌봄의 주체나 대상이 변화되어야 함을 예견하고 있다.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후기 근대적 사회변동은 근대적 젠더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젠더구조를 해체하는 급진적인 도전을 하지 않는 '임시방편적' 문제해결의 방식으로서는 우리가 당면한 가족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프레이저(Fraser, 2000)는 페미니스트 담론과 실천에서 가정하고 있는 보편적 부양자 모델(universal breadwinner model)이나 양육자 등가 모델(caregiver parity model)도 성 평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미래의 대안으로 보편적 양육자 모델(universal caregiver model)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인간의 삶을 조직해 온 노동과 부양의 근대적 패러다임에서 돌봄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여성들의 삶의 방식을 토대로 사회를 재조직하는 것이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이 돌봄의 주체가 되며, 국가나 사회가 돌봄의 책임을 공유할 때이다. 일·가족·지역사회 공동체의 통합을 위해서도 돌봄의 사회적 확산과 제도화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정책적 사고나 담론의 변화가 요구된다. 평등, 권리, 돌봄의 원리들이 동시에 수용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나 국가의 정책적 개입은 새로운 사고를 동반할 때만이 실현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수정(2004).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 한국사회학 제38집 5호. 한국사회학회.
- 김혜경(2004). 보살핌노동의 정책화를 둘러싼 여성주의적 쟁점: “경제적 보상”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0권 2호. 한국여성학회.
- 마경희(2004).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 영향요인과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의 현실과 변화. 한국 사회학회 기획 심포지움.
- 박영란 외(2003). 여성빈곤 퇴치를 위한 정책개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변화순(2004). 가족정책 방향 정립 및 통합적인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가족정책의 방향 정립 및 통합적인 시행방안 세미나 자료집. 한국여성개발원.
- 쏘온, 배리·매릴린 알룸(1991).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권오주 외 옮김, 한울.
- 앤소니 기든스 (1993).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배은경 역, 서울: 새물결.
- 여성부(2004). 한국가족의 현실과 변화. 여성부.
- 여성부(2003).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여성부
- 울리히 벡 외(1999). 사랑은 지독한 혼란. 강수영, 권기돈, 배은경 역. 새물결.
- 윤홍식(2004a). 가족정책 방향 및 가족지원기본법(안)의 주요내용 : 가족지원기본법(안)의 법제화 필요성. 가족정책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가족지원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_____(2004b). 가족의 변화와 건강가정기본법의 대응: 한국가족정책의 원칙과 방향 정립을 위한 고찰. 한국가족복지학, 제14호.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 이미경(1999). 신자유주의적 ‘반격’하에서 핵가족과 ‘가족의 위기’. 공감.
- 이박혜경(2004).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가?” 가족개념의 발상전환을 위한 간담회 자료집. 여성단체연합.

- 이재경(2004a). 한국 가족은 '위기'인가?: '건강가정' 담론에 대한 비판. 한국여성학, 20권 1호. 한국여성학회.
- _____(2004b). 가족에 대한 정의는 필요한가? 여성단체연합 심포지움 자료집(미간행).
- _____(2003). 가족의 이름으로: 한국근대가족과 페미니즘. 또 하나의 문화.
- _____. 장미혜(2004). 고용조건이 일과가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제와 사회, 64집. 겨울호. 한국산업사회학회.
- 장혜경 외(2002). 외국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정책 및 전담부서의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조혜련(2003). 저소득 여성의 한부모 노릇(single parenting)에 관한 여성주의적 연구.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이화여자대학교
- 통계청(1994). 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변화.
- _____(1996). 경제활동인구연보.
- _____(2003). 경제활동인구연보.
- _____.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 _____. 인구동태통계연보. 각년도.
- 한국여성단체연합(2003). 성인지적인 가족정책을 모색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2003). 평등한 일 · 출산 · 양육.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개발원(2004). 여성통계연보.
- _____. (2003). 여성통계연보.
- _____. (2002). 여성통계연보.
- _____. (2001). 여성통계연보.

Bacchi, C. L.(1999). *Women, Policy & Politics*. Sage

Barnett, R. C. & Caryl Rivers(1996). *She Works and He Works*. Harvard University Press

Drago, R. Rosanna Scutella and Amy Varner(2002). *Work and Family*

- Directions in the US and Australia: A Policy Research Agenda.*
Melbourne Institute Working Paper No. 12/02. Melbourne
Institute of Applied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 Eisenstein, Z(1981). *The Radical Future of Liberal Feminism.* Longmans.
- Fraser, Nancy(2000). *After the Family Wage: a Postindustrial Thought Experiment.* B. Hobson(ed.). *Gender and Citizenship in Transition.* Routledge.
- Hobson, B.(ed.)(2000). *Gender and Citizenship in Transition.* Routledge.
- Hochschild(2003). *Commercialization of Intimate Lif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amieson(1998), Lynn(1998). *Intimacy : Personal Relationships in Modern Societies.* Polity Press.
- Lewis, S., Rhona Rapoport and Richenda Bables(2003). "Reflections on the Integration of Paid Work and the Rest of Life".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Vol. 18 No. 8
- Mazur, A.G.(2002). *Theorizing Feminist Policy.* Oxford
- Moe, K. S.(2003). *Women, Family, and Work.* Blackwell
- Pateman, Carole(1988). *The Sexual Contract.* Polity.
- Skolnick, A.(2000). *A Time of Transition: Work, Family and Community in the Information Age.* Family and Work Institute.
- Rosaldo, Michelle Z.(1974). *Women. Culture and Society: A Theoretical Overview, in M. Rosaldo and L. Lamphere(eds.). Women. Culture and Society,* Stanford University Press.
- Rubin, Lillian(1997). *Families on the Fault Line.* Harper Perennial.
- Williams, Joan(1999). *Unbending Gender: Why Family and Work Conflict and What to Do about It.* Oxford University Press.

The Change of the Public/Private Spheres and Family Policies beyond 'the Family'

Jae Kyung Lee

The traditional family policy has been formed to support and maintain "normal families" on the premise of separation of public and private spheres. Moreover, family policy has focussed on preventing the disintegration of the normal family, supporting problematic families passively, and solving family problems in the boundary of the "family". However, the ongoing changes in everyday life and the labor market in the global economic system in the twenty-first century demand new views and approaches on family policy as well as an alternative concept of "family".

In this paper, the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the changing family in the twenty-first century are viewed as a challenge to the modern combination of work and family, and the instability of the gender system and the nuclear family. Based on such views, the transition to a radical thinking on the concept of family and alternative paradigms of family policy will be explored.

This paper categorizes and analyzes the issues of family policies such as 1) the separation of work and families; 2) the conflict of work and family I: the competition of the motherhood right and the labor right; 3) the conflict of work and family II: the change of intimacy and the void of care. Based on these analyses, I suggest these policies beyond 'the family': 1) the reintegration of work, families and local communities; 2) the extension of notion of the family(household) redefining the border of the family as well as the diversity of the family form 3) the spread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are.

Keyword: family policies, work/family, intimacy, care

* The Department of Women's Studies, Ewha Womans Univ.